

광남시론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개천절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배달민족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서부터 기려오다 삼일절과 제한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해 오늘날까지 경축해 오고 있는 우리 민족국가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는 시작이 있기에 마련이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왕검이 4359년 전 (기원전 2333년) 시월 상달에 고조선을 세우고 왕으로 즉위한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은 단군이 처음으로 배달겨레의 민족국가를 건국한 날을 경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 문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국가의 기원을 기념한 매우 뜻깊은 국경일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의 본래 뜻은 단군 조선의 건국일을 뜻하지만, 이보다 124년 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 시월 상달을 말한다.

또한 개천절은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을 선양하는 날이기도 하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개천절의 정신적 핵심인 홍익인간은 단군왕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일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통일의 시원은 개천절에서부터

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도 인류 공영으로 높이 평가하고 찬양한 바 있다.

독립유공자며 역사학자로 개천절을 비롯한 국경일 노래를 지으신 위당 정인보 선생은 개천절 노래에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라고 우리 민족의 시원과 민족정신인 얼과 혼을 개천절 노래에 담고 있다.

지금이야 우리의 의지와 달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됐지만, 헌법에 따른 미수복 지역으로 언젠가는 하나인 통일된 민족국가가 돼야 할 한 뿌리인 북한도 개천절만은 같이 경축하고 있으므로 통일의 당위성과 근간을 개천절에 서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민족의 시원과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에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아가 한다. 이처럼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 자산으로 남과 북이 민족의 주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통일국가의 근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래 종교의 도입으로 민족의식을 배제한 채,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인 개천절 경축일에 언제부터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경축사를 대독해 오더니 이마저도 국무총리 경축사로 격하해 통일의 근간이 될 개천절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어나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은 조상을 섬기고 참배하는데, 뿌리 없는 미국의 영향으로 외래 종교가 배척한다고 국조 단군을 우상으로 치부하고, 근래엔 신보수주의로 등장한 뉴라이트까지 역사관을 비롯해 민족의 정체성과

시원마저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욱이 이들은 역사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니 한민족으로써 갈라져 있는 북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국경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경축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치권부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외래 종교단체의 정치적인 숫자놀음으로 도외시하다 보니 국민도 덩달아 개천절 경축 행사를 등한시하고 있음이 문제다.

그나마 우리 지역은 20여년 전부터 재계 원로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국조숭모회를 결성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해마다 개천 대제와 함께 기념사를 거행해 오고 있으나 올해는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마저 종교단체를 의식해서인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민족의 시원인 개천절은 단순한 공휴일을 넘어서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의 시작을 기리는 경축일이다.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역사인식 없이 어떻게 민족의 주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민족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석학들도 찬양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기독교의 사랑이나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보다 한 차원 높게 평가받고 있는 철학이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 빛나는 단군왕검의 건국이념에 대한 대내외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개천절에서부터 배달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영광을 이룩하고 인류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전국의 공장과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감당하는 위험과 부담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에너지정책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린다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는 한빛원전 6기가 위치해 있다.

영광과 인근 지역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협조하며 원전과 함께 살아왔다.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불안과 환경적 부담, 지역개발 제약은 이들에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다.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지역의 이러한 부담을 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안전을 위해 방사선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대피시설과 대피로를 정비하며, 방재장비를 확보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주민 건강관리와 환경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원전의 계속운전과 사용후핵

연료 저장에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안전은 선언만으로 지킬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러한 지역의 부담을 보전하고 주민 안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발전량 1kWh당 0.5원으로 시작해서 2015년부터 1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세율은 그대로다. 물가와 인건비, 전문장비 가격은 올랐는데 안전을 지킬 재원의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2024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인근 시·군·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내를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사고의 영향은 행정구역 경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인근 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별도의 재원을 확충하지 않은 채 기존 세입을 나누면서 광역 방재체계를 운영할 가용재원은 줄었다. 지원 범위를 넓혔다면 재원도 함께 확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이다.

한국지방재연구원은 원전의 중대사고와 방사능 유출 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발전량 1kWh당 13.2원에서 70.1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사고 가능성과 피해 규모 등에 관한 가정을 적용

한 연구 결과이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현행 세율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근거다.

이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부담을 모두 보상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장기간의 세율 동결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를 반영하면서 발전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본 재원을 확보하자는 요청이다.

추가 세수의 사용에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방사능 방재시설과 대피 기반 확충, 환경·방사선 감시, 주민 건강 관리, 사용후핵연료 안전대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어디에 얼마를 썼으며 주민 안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공개하고, 사업 성과도 점검해야 한다. 물가와 안전관리 비용의 변화를 반영해 세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지역의 방재 수요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를 위해 원전을 수용한 지역에 충분한 안전재원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책무다.

더 이상 원전지역의 안전이 1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설

행정력 집중...앰코 공장 증설 차질없어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의 광주공장 대규모 증설이 현실이 됐다. 앰코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광주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을 열고 3조원 규모의 광주공장 내 후처리 공정 제조 라인 증설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증설은 단순히 생산 공간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용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앰코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기업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가 주력 사업이다.

이번 3조원 투자는 1999년 앰코코리아 광주공장 설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단일 투자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앰코는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는 광주공장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생산라인 추가 증설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통합특별시의 공이 컸다.

그동안 앰코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융·복합·혁신·전략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방안과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앰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앰코가 공장 증설분의 폐수 처리 문제를 두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통합특별시가 민원제기 이틀만에 이를 해결한 것이다.

장성군과 '반도체 폐수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장성공공폐수처리장 연계 처리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 덕분에 투자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앰코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에 오는 2031년까지 AI·고성능 컴퓨팅용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 4개동을 증설기로 해 신규 일자리 2000개 이상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광주공장부지에 2030년 초반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 앰코의 후공정 라인까지 맞물릴 경우 설계·제조뿐 아니라 패키징·검사 등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을 전남광주에서 완결할 수 있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첫 실행인 앰코의 대규모 증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없어 소멸 대책 절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과일·채소·육류·알류·현유유·잡곡·두부·임산물 등을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18만 7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인근에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부족해 주민들이 영양가 있는 식료품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조차 못 한 채 대거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이런 농촌지역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3628개 읍·면·동중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했는데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13곳, 강원·경북·경남·충북 7곳 등이 뒤를 이어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문제는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매일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된다는 데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총 총잔액 551억4200만원 중 7.3%에 달하는 40억 44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는데 전남광주는 총잔액이 56억 5109만원중 소멸액이 4억56770만원이나 됐다. 완도군은 소멸률이 19.8%로 전체 소멸률 평균 (7.3%)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오프라인 사용처가 전혀없는 읍·면·동은 상황이 심각하다.

실제 화순군 청풍면은 상반기 종전된 금액 잔액이 소멸됐으며, 장흥군 유치면 (52.9%) , 구례군 문척면 (37.1%) 등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면 지역 곳곳에서 총잔액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이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몰도 농촌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취재수첩

현실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마련을

이산하

정치부 차장



비대면진료가 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초진 처방일수를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약사단체 또한 의약품 처방일수와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두고 플랫폼 업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의 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단, 평생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으며, 산업계는 처방일수와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만성·관리질환 이용자의 58.0%가 30일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적 있음을 강조한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이 적용되면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환자의 시간과 진료비 부담의 부담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초진 30일 처방을 평생 한 차례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약속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인 대면진료 우선,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분석에서 초진 처방의 73.0%가 7일 이하로 나타났는데, 처음 진료하는 환자에게 한 달 분량의 약을 처방하면 부작용이나 진단 지연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처방 일수와 배송을 놓고 약사단체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일수와 배송 통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는 과도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환자를 놓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약품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 제 입법 예고된 만큼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오직 서비스 대상자만을 위한, 현실에 맞는 실용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면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978-7090	370-7200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